

# 공공기관 채용 겹돈다

올 1분기 채용 6515명에 그쳐 정부, 하반기에 목표 달성 계획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 1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채용을 중점 추진해 올해 목표인 '2만8000명+α'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65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치인 2만8000명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치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만3000명으로 설정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 1분기 목표치

는 5300명으로, 정부는 이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청년 구직난이 계속돼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연간 신규채용 목표를 5000명 늘렸다. 수시 증원과 퇴직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명예퇴직 활성화로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만약 1분기와 같은 속도로 연말까지 채용한다면, 올해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2만6060개에 그치게 된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분기에만 25%인 7000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23%에 그쳐 약 500여명 가까이 모자란 셈이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3777명을 뽑아 전체의 절반 이상(58.0%)을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은 전체의 31.4%인 2045명을 채용했다. 세부적으로는

기금관리형이 725명

(11.1%), 위탁집행형이 1320명(20.3%)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기업은 10.7%인 694명을 새로 채용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355명(5.4%), 준시장형 공기업은 339(5.2%)명에게 일자리를 줬다.

정부는 증원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만약 정부가 올해 목표대로 2만8000명을 채용한다면 지난해 2만2554명보다 24.1%를 더 뽑는 셈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5년 9.5%를 정점으로 2016년 8.7%, 2017년 7.4%로 둔화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 현재는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진도상으로는 2만8000명을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채용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기자 grandtrust@

# 54% “취업지원 잘 몰라”

(구직자)

35%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용 '기업 생태계 조성' 보완 필요성

구직자 절반 이상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려진 취업정책 중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구직자 464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3%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2년 이상 정규직 근무 시 정부와 기업 지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최대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년형에,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

지 적립할 수 있는 3년형과 5년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다.

구직자들은 이어 '소득세 감면'(23.5%), '내일채움공제'(15.7%), '전월세 보증금 대출'(13.4%), '산업단지 교통비 지원'(12.1%) 순으로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직자 절반 이상(54.3%)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긍정적이다'는 답변은 34.3%로 나타났고,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11.4%로 적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취지가 좋아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여겨짐'(49.1%·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입사 의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 이상(52.8%)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답했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44.2%였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였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45.7%·복수응답)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마련'(41.8%),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제재'(33.2%), '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32.8%),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정책 마련'(13.4%)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중 가장 크다고 느끼는 것은 '연봉'(45.9%)으로 나타났고, 이어 '복리후생'(25.4%), '근무 환경'(11.2%), '안정성'(8.6%), '주변의 인식'(3.4%) 등의 순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상명대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1일 오후 천안캠퍼스에서 재직중인 동문교수 30여명이 재학생 19명에게 9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손하트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

## 中企 “중장년 채용, 경영성과 도움”

66.5% 기업에 '긍정적 영향' 노하우 전수 등 업무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중장년 직원 채용이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알바천국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사이트 잡서치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3월27일~4월9일까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88곳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중견기업의 채용계획 및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근 3년 사이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76.7%인 22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66.5%는 채용한 중·장년이 경영 성과에 '매우 도움이 됐다'(33.9%)거나 '약간 도움이 됐다'(32.6%)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4.5%)거나 '전혀 도움이 안됐

다'(0.9%)는 부정적 답변은 소수였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야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32.5%), '업무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28.7%), '업무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16.1%), '매출증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14%),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융화'(8.7%) 등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중·장년의 평균 근무 연수는 6개월 이하(7.2%), 1년 이하(19.5%), 3년 이하(46.6%)로, 재취업 3년 내 퇴사 비율은 73.3%로 집계됐고, 5년이하 19.9%, 5년초과 6.8%였다. /한용수 기자

## 성비위 은폐·무대응 등 징계기준 신설 추진

사학·학교재단도 징계 대상 교육부-자문위 개선안 논의

사학 및 학교재단이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4월 21일 오후 대구 중앙로 중앙파출소광장에서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를 하고 있다. /연남뉴스

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이뤄져 왔다.

법이 개정되면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함께 개정해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음화반포나 공연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속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나 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상세 대응 메뉴얼을 초·중등학교용과 대학교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메뉴얼에는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보호대학원(원장 김관규)이 2018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는 오는 18일까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설립 30년을 맞는 언론정보대학원은 ▲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 ▲광고홍보학과(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외국인 신입생은 별도로 모집한다. 1998년 국내 첫 설립된 정보보



안관련 전문교육기관인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모집학과는 ▲정보보호학과(정보보호전공, 블록체인전공) ▲사이버포렌식학과(사이버포렌식전공) 등이다.

'블록체인 전공'은 이번 학기 정규석사 교육과정으로 신설돼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동국대는 지난 2016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산하에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한용수 기자

#### 성신여대, 9일부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9일부터 8일 간 2018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5곳으로 6월 9일 전형을 치르고 7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각 대학원 지원 자격은 신입학의 경우 학사(석사) 취득자 또는 2018년 8월 학사(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해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남녀 모두 지원 할 수 있다.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전형방법은 서류(성적) 50%와 면접 및 구술시험 50%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일괄 합산해 전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예능계 열은 실기평가 요소가 추가된다.

지원서는 오는 17일 17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com)에서 접수할 수 있고, 서류제출은 18일 17시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